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November 2022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독일: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은 유럽연합법("EU Law")과 양립 가능하다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은 납세자가 적절한 수준의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납세자의 적정 과세소득은 신고된 과세소득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함. 이러한 경우, 독일 과세당국은 특정 가격대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해당 가격대 범위의 상위값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음. 또한, 독일 과세당국은 과세소득 조정금액에 추가로 가산세(조정금액의 5%~10%)를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독일 법원은 EU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이러한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이 유럽연합법에 상충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함.

EU 사법재판소는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이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과 유럽연합법과의 양립 가능성을 분석함

먼저, EU 사법재판소는 판례법에 근거하여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의 도입 및 시행을 통해 납세자에게 국외특수관계거래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국외특수관계거래가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는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과세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함. 또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간의 적절한 과세권한 분배에 대한 필요성 또한 적절한 수준으로 충족될 수 있음에 따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도입 및 시행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함. 이에 따라, EU 사법재판소는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의 도입 및 시행은 유럽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다음으로, EU 사법재판소는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미준수에 따른 추가 가산세 부과 유럽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분석함. EU 사법재판소는 판례법에 근거하여 추가 가산세가 위법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 가산세 부과는 국가 법규(National rules) 준수의 정도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함. 또한, EU 사법재판소는 추가 가산세와 위법행위의 중대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정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추가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위원회의 견해를 확인함. 아울러, EU 사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조정 과세소득의 최대 10%를 상한으로 두고 추가 가산세 부과하는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은 과하지 않음. 이러한 관점에서 EU 사법재판소는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미준수에 따른 추가 과태료 부과는 유럽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U 사법재판소는 독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은 유럽연합법과 양립 가능하다고 판결함

네덜란드: 필라 2 규정 시행을 위한 온라인 회담 개시

2022 년 10 월 24 일, 네덜란드 재무부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세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가 수립한 필라 2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앞서 자국 내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회담을 개시함. 필라 2 는 연결매출액이 7.5 억 유로 (약 1.3 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임.

본 온라인 회담은 2022 년 9 월 8 일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독일 정부가 2023 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개시됨.

[배경]

2021 년 12 월 22 일,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OECD 가 필라 2 를 통해 제시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모델을 유럽연합법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지침서를 발간함.

본 EU 지침서는 i) EU 회원국에 소재하는 법인 및 ii) 최근 4 개 회계연도 중 최소 2 개 회계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5 억 유로 (약 1.3 조 원) 이상이며 EU 회원국 소재 모회사를 둔 비거주법인을 대상으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한편, EU 경제금융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COFIN")는 2022 년 6 월 17 일 헝가리 정부가 본 EU 지침서 도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아직까지 본 EU 지침서에 대한 EU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향후 몇 달 안으로도 EU 회원국 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EU 경제금융위원회는 "강화된 협력 절차 ("Enhanced cooperation procedure")에 따라 최소 9 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본 EU 지침서 도입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료할 수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온라인 회담을 개시함으로써 필라 2 도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였음. 또한, 필라 2 도입 및 시행에 있어 EU 회원국 간 법적 근거의 일치화 (Harmonized legal basis)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가 발간한 EU 지침서를 따르고자 함.

[주요 회담 내용]

네덜란드 재무부는 본 온라인 회담을 통해 입법안 (70 페이지 분량) 및 관련 주석 (267 페이지 분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입법안은 GloBE 모델 규정의 다음 세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 소개함

- 적격 국내 최저한세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

주석은 본 회담의 주요 목적은 GloBE 모델 규정과 EU 지침서 간의 포괄적인 일치화 (Full alignment)이며, 네덜란드 필라 2 규정은 EU 지침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향후 네덜란드 필라 2 규정 시행에 따른 최저한세는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별도로 입법될 예정인 법률(Wet minimumbelasting 2024)에 의거하여 법인세와는 분리되어 추가과세(Top-up tax) 명목으로 부과될 예정임.

본 온라인 회담은 총 6 주에 걸쳐 진행되며, 모든 의견은 2022 년 12 월 5 일까지 네덜란드 재무부에 제출되어야 함. 네덜란드 정부는 온라인 회담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 후 확정된 최종 입법안을 2023 년 봄까지 하원 (Lower House of Parliament)에 전달할 예정임.

최종적으로, 필라 2 규정은 2023 년 12 월 31 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세부적으로는 적격 국내 최저한세 및 소득산입규칙은 2023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4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KPMG 의견]

EU 지침서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적격 국내 최저한세 및 소득산입규칙의 도입을 2029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음.

한편, 다음 사안들은 본 온라인 회담의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 규정준수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한 면제 조항(safe harbors)
- 최저한세 신고서식의 교환을 위한 행정체계
- 과세분쟁 해결방안

향후, 상기 사안들을 포함하여 2022 년 4 월 25 일 OECD 가 필라 2 이행체계 협의를 목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추가 지침 및 다자간 이행체계 (Multilateral instrument)를 기반으로 하는 원천지국 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 모델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1 중 6901 (2022.10.1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주장하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쟁점]

-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전원공급장치(SMPS, 트랜스) 및 진동모터 등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함
-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1차 협력업체로서 AAA의 해외진출에 따라 BBB 유한공사(이하 "BBB"라 한다), CCC 유한 공사(이하 "CCC"이라 한다) 라는 해외현지법인(이하 각 해외현지법인을 모두 합하여 "쟁점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처분청은 2021.3.11. 부터 2021.4.23.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에게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회수약정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금액(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이자 합계 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21.8.25. 청구법인 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원고 주장

-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이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 청구법인은 주 거래처인 AAA의 협력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현지법인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음. 즉,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이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함
 - 쟁점매출채권은 ①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② 주요 거래처의 특성상 거래처 유지 및 매출 극대화과 제품 설계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③ 쟁점현지법인의 생존은 청구법인의 미래 계속기업 가능성을 결정하는 상황이었던바,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지연회수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또한, 관련 법령 등은 정상가격 및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정상가격 및 정상이자율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에서 의도하고 있는 국제거래 조세행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청구법인과 쟁점현지법인은 독립적인 법인이라는 하나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된 법인이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쟁점현지법인의 지속적자, 자본잠식 등에 따라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불가피하였으며 쟁점현지법인과 청구법인 모두 쟁점거래로 인해 누린 금융혜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쟁점매출채권에 국조법상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함
-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쟁점매출채권의 회수에 관한 정상이자 계산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 역시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모법인의 국내에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한 것은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여금의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음
 - 오히려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LIBOR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금리로서, 이미 본 사안과 같은 국제거래에서 합리성이 검증된 기준금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에서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더할 반환이자를 산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즉 LIBOR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처분청은 우선적으로 LIBOR의 적용을 검토하였어야 하며, LIBOR를 적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LIBOR를 기준금리로 하되, 쟁점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적용 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절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지연회수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 쟁점매출채권의 회수에 관한 정상이자 계산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 역시 모 법인 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모 법인의 국내에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이자 율을 산정한 것은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여금의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음
-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무리하게 회수한다면 쟁점현지법인은 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 회사인 청구법인도 동시에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바 쟁점현지법인과 협업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경영의 일부인 경우에 해당함

3) 처분청 주장

-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과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수년간 회수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쟁점매출채권을 90일 이내에 회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쟁점현지법인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회수기일이 90일을 초과하는 쟁점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였으며,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더구나 쟁점현지법인에 대하여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도 매입대금은 60일 이내 지급하는 것과 달리 매출대금을 장기적으로 지연회수 하는 것은 쟁점현지법인에게 대여금을 무이자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함
-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송을 하거나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없이 장기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해당하는 바, 실질적으로 매출채권 등을 전부 회수한 후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판단

- 쟁점 1.

2016년에 실시된 세무조사에서도 쟁점현지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과세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90일 이내에 회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는 달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해 국조법 제4조를 적용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 산정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는바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규정(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을 바탕으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 2.

쟁점현지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완제품, 반제품, 부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현지 거래처에 그대로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의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추가 조립,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현지법인의 재무제표상 BBB 및 CCC은 2016사업연도까지 결손이 지속되다가 2017사업연도에 이르러 당기순이익이 일부 발생되었고, 동양전자베트남은 2018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주요 거래처인 AAA와의 거래관계 유지 등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03 관세

FTA 관련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시사점 (조심 2022 관 0006, 조심 2022 관 0114)

1) 수출자 자료 미제출로 협정관세를 배제 및 추징 사례 (조심 2022 관 0006, '22.10.14)

| | |
|------|--|
| 제목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결정요지 |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 | | |
|------|---|---|
| 사실관계 | 1 | 수입자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물품 수입 |
| | 2 | 관세청은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
| | 3 | 수입자는 요청받은 기간 내에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 | 4 | 관세청은 원산지 관련 자료 미수취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후 추징 |
| | 5 | 관세청은 추징금액에 가산세 부과 |
| | 6 |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 |
| 쟁점사항 | 1 |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2 |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 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결정사항 | 1 | 조세심판원은 약 한달정도의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는 정당하다고 판정 |
| | 2 | 조세심판원은 수입자가 사전에 FTA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됨이 정당하다고 판정 |
| | 3 | 조세심판원은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려는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며, FTA 부정 적용은 수입자에게도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 |

2) C/O (Certificate of Origin, "C/O")형식요건 불충족으로 협정관세율 배제 및 추징 사례
(조심 2022 관 0114, '22.10.18)

| | | |
|------|---|---|
| 제목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 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결정요지 | 한중 FTA 와 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행위와 물품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 사실관계 | 1 | 수입자는 한-중 FTA 협정관세율(0~4%)의 세율을 적용하여 물품 수입 |
| | 2 | 관세청은 수입신고 수리한 후 3 년이 경과하여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 | 3 | 수입자는 관세청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 전달 |

| | | |
|------|---|--|
| | 4 | 관세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이 규정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후 추징 |
| | 5 | 관세청은 추징금액에 가산세 부과 |
| 쟁점사항 | 1 | 한-중 FTA 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2 |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통관단계에서 검사 및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결정사항 | 1 |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원산지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5 년 이내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는 정당하다고 판결 |
| | 2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됨이 정당하다고 판결 |

[KPMG 의견]

상기의 최신 FTA 관련 조세심판원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자가 FTA 원산지 조사 사전에 검증 및 준비하였다면 회피할 수 있는 Risk 임.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자인 수입자에게 있음. 따라서 FTA 원산지 조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FTA 를 점검한다면 아래의 Risk 를 회피할 수 있음.

- 사전 검토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Risk 제거
-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기한 내 관세당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Risk 제거
-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 이전에 자체적으로 FTA를 점검하였음을 주장하여 가산세 부과 Risk 제거
- FTA 자체 점검을 통해 원산지 확인 의무에 귀책이 없음을 주장하여 수정수입계산서 미발급 Risk 제거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1) 개요

-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4일(금) 제출함
-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옴
- *①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②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③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④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⑤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⑥임금 수습 요건(notice 51)
-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

2)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부 의견서 주요 내용

① 차별성 완화 방안 요구

(유예 기간)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최종 조립 요건)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

②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

(광물 요건)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 제안

(부품 요건)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

③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요청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 제안

*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부여

[KPMG 의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2차전지산업도 배터리 관련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이번 정부의 IRA 관련 의견서는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관련 산업 당사자들은 향후 미국 정부의 대응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